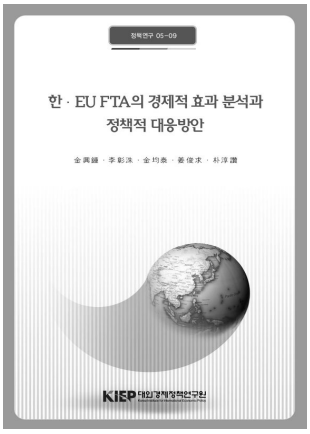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저자: 김흥종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이창수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
김균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강준구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박순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한 · 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 · 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한 · EU FTA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양국간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양국의 무역 및 투자관계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교역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양국은 FTA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인식된다. 한국과 EU는 산업구조가 보완적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다면 많은 구조조정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장의 산업구조 분석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기계류, 철강 · 금속, 섬유 · 의류 등 적지 않은 부문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 가공식품, 광물성 생산품, 목재펄프 · 종이, 시멘트 · 유리,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등이 민감 산업으로 도출되며, 축산과 목제품은 절대적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관세구조가 전반적으로 EU보다 높아서 관세철폐에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다. 양국은 적지 않은 통상현안을 갖고 있으며 FTA 협상시 이 같은 통상현안은 다시 한번 재조명 될 것이 확실시된다.

3장에서는 한 · EU FTA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을 행하였다. 이 분석은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EU 확대이후의 25개국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에 비해 우월하다. 또한 일반균형연산(CGE) 모형 분석을 통하여 가장 현실적인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한 한 · EU 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CGE 모형 분석뿐만 아니라 FTA가 상품무역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수출입 탄력성 지수를 이용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양자간 FTA에서 서비스 무역은 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간 FTA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양자간 FTA에 관한 경제적 효과분석은 동 FTA가 한국의 생산, 소득 및 후생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FTA는 양자간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 윈-윈 게임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의 완전 개방, 농업과 서비스업의 50% 개방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한 · 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는 15조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원(3.08%)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도 단기에서는 35만원(2.16%), 장기적으로는 48만원(2.96%)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對세계무역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 단기에는 64.7억불(2.62%)의 순증이 예상되며 장기에는 무려 110.4억불(4.47%)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의 경우도 단기에는 63.4억불(3.81%), 장기에는 81.9억불(4.92%)이 증가할 것이다. 한 · EU FTA로 취업자수는 단기적으로 30만 명(1.81%), 장기적으로 59만7천명(3.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한국의 다른 FTA의 경우와 비교한 선행 결과에 따르면, 한 · EU FTA는 미국 및 ASEAN과의 FTA에 비해 GDP증가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본 및 기타국과의 FTA보다는 경제적 효과가 크며 특히 구조조정비용이 미국 및 ASEAN과의 FTA보다 현저히 낮아 EU가 한국의 바람직한 FTA의 대상국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한 · EU FTA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각국의 GDP를 약 0.1% 증가시켜 국가별로 GDP가 15억 불에서 20억 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회원국과 관련해서 볼 때 신규회원국은 한국과의 FTA에서 기존 회원국만큼 많은 후생의 증가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자간 FTA는 반드시 교역상의 이득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신규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회원국에서도 한 · EU FTA는 경제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4장은 2장과 3장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토대로 주로 정성적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한 · EU FTA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EU와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여타 대상국과

는 다른 EU 고유의 특성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는 EU가 한 국가가 아니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의 연합체라는 성격에서 나오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 연구에서는 EU의 여러 가지 성격 중 FTA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를 EU의 공동통상정책, EU의 FTA 정책, 서비스시장을 포함한 EU시장의 특성, 한국의 FTA 추진이 EU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자간 통상현안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 결과와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EU의 공동통상정책은 FTA 협상시 EU집행위가 회원국을 대신해서 한국과 협상을 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공동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EU의 공동통상정책이 관할하는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EU 집행위와 회원국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역내시장의 통합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통상정책의 불명확성은 EU가 대외교섭을 나서는데 협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04년에 신규로 가입한 신규회원국에서의 EU규범 및 공동통상정책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U의 FTA 정책은 개도국 및 특별한 역사적, 지리적 관련이 있는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특혜협정 체결을 우선시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비유럽권국가들과도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협정은 EU가 멕시코 및 칠레와 맺은 FTA 협정이다. 이 협정들은 정치 대화, 통상 및 경제 관계 그리고 협력의 세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포괄적 FTA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점진적이고 호혜적인 상품 자유화 일정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농산물 등에서 EU의 보호 수준은 상당히 높았으며 양허의 폭에 있어서도 FTA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특이한 점은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 별도의 협정을 맺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투자협정을 FTA협정과 병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EU시장은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고 시장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EU경제의 경제성장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급속한 시장통합에 따른 구매력의 증가는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아직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은 EU의 서비스시장에서 발견되는 여전한 장벽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 · EU FTA에서 한국은 역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시장의 통합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자유화의 정도를 동등한 지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국민대우의 요건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 한국과 EU간의 경제관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과의 FTA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산업구조가 EU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한 · 미 FTA, 한 · 일 FTA의 체결이 한 · EU 경제관계 및 EU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 · 미 FTA, 한 · 일 FTA 또는 한 · 미 FTA와 한 · 일 FTA의 동시 체결은 한국시장에서 EU에게 상당한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오며 EU의 생산 및 무역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 · 미 FTA는 EU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 · 미 FTA의 추진은 한국이 EU와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협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EU의 입장에서는 통합되는 동북아시장에서 현재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데 한국과의 FTA가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양자간 현안에서는 공산품 양허방식과 관련하여 관세철폐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적절한 개방의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정한 FTA에서의 상품양허방식이 중요한 참고가 된다는 사실을 멕시코의 사례가 보여준다. 농산물의 경우 직접지불에 대한 EU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농촌개발을 촉진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2005년 홍콩 DDA 각료회의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처럼, 농산물 관세율 구조는 관세할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 할당에서도 할당액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국 농산물의 관세율 구조를 고려해 볼 때 높은 관세율구조를 완화시키면서 관세할당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농산물에 대한 관세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조와 관련해서는 EU가 DDA에서 결정된 수출보조 시한이전에 수출보조금을 감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무역구제조치는 우리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EFTA와의 FTA 협상에서는 한국과 EFTA 국가들이 프렌즈그룹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구제조치의 남발에 대한 상당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EU는 이와는 반대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가장 안전한 방식은 WTO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양측 무역구제기관의 공동 관심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원산지규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는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가격결정기준, 그리고 역외가공의 인정여부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 기준을 기본으로 세번변경이나 특정가공공정의 탄력적 적용이 우리 산업, 특히 섬유 · 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가격과 관련해서는 FOB 또는 공장도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역외가공의 인정여부는 남북합작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인정품목의 수

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TBT와 SPS의 경우 EU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U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무역은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GATS DDA 2차 양허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하되,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진출과 과세문제, Mode 4의 허용폭과 속도,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 부문은 양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그 동안 많은 논의를 해 온 분야이다. 경쟁 부문이 양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DDA차원의 경쟁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경쟁법의 상호 적용뿐만 아니라 다자간 경쟁위반사례에 대한 협력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을 준수하되, EU는 샴페인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청해 올 것이다. 세계경제